전주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 변경 승인 ‘파문’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 · 한승우 시의원, “불법… 감사청구 선언”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와 한승우 전주시의회 의원 등은 20일 전주시청에서 전주시의 ‘리싸이클링타운’ 주관 운영사 변경 승인 건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주시가 지난 1일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주관 운영사 변경 요청을 승인한것에 대하여 파문이 일고있다.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와 한승우 전주시의회 의원 등은 20일 전주시청에서 전주시의 ‘리싸이클링타운’ 주관 운영사 변경 승인 건에 대하여 반박 기자회견을 가졌다.

논란의 핵심은 변경 승인된 성우건설(주)이 폐기물 처리 시설 운영 실적이 없어서 시설사업기본계획과 실시협약에서 규정한 운영사로서 자격이 충족되지 않으며, 사업시행자가 시설의 운영 주체를 변경할 시 전주시의 승인이 필요하나 승인 절차가 누락됐다는 것이다.

지난 1일 전주시는 사업시행자의 운영사 변경 요청을 결국 승인했었다.

기존에 사업시행자인 (주)에코비트워터에서 성우건설(주)로 주관운영사를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우건설의 운영자격 등에 관한 논란이 발생하자, 사업시행자는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컨소시엄에 참여한 4개 회사가 공동수급으로 시설을 운영하겠다고 변경된 계획을 제출했고, 전주시가 이를 승인한 것이다.

이들의 기자회견에 의하면,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은 출자회사들 중 1개의 회사가 소위 ‘주관운영사’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전담해왔다. 그런데 이제와서 사업시행자는 공동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그럼에도 전주시는 “이 공동운영이 어떤 형태로 이뤄지는 것인지, 실제로 가능한 것인지 확인도 않고 승인을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그저 사측에서 지분에 따른 공동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자, 전주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를 승인했다”며 “공동운영에 대한 승인은 허울이고 전주시의 실제 목적을 어떤 형태로든 운영자격 논란을 벗어나기 위한 꼼수를 찾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를 들어 반박했다.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를 입찰 전에 구성하게 해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아니된다. 또한, 면허(등록)가 필요한 공동수급에 대하여는 면허(등록) 미보유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즉 전주종합리싸이클링운 운영과 관련해 사후적으로 공동수급으로 변경은 불가능하다. 사전에 공동수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폐기물처리업의 면허를 보유한 업체만이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절차상 요건이 누락되었음에도 성우건설이 위 시설을 이미 올해 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사실상 사업시행자들이 절차를 어겨놓고 전주시에 사후승인을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사업시행자의 불법을 합법으로 ‘세탁’해주기에 이른 전주시가 주무관청으로서 역할을 포기했고, 그 과정에서 11명의 노동자가 불법적으로 해고되었다”며 “2월 중 전주시를 상대로 한 감사원 감사청구 운동에 돌입하겠다”고 선포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 · 완주 상생협력 ‘속도’

공덕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본격 추진

전주시 금상동과 완주군 소양면의 경계로, 과거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공덕세천에 대한 정비가 본격화된다.

전주시는 올해 전주·완주 상생협력 사업(2차)으로 추진 중인 ‘공덕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시작을 알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공덕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올해부터 4년간 총사업비 250억 원을 투입해 전주시 금상동과 완주군 소양면 경계에 흐르는 총길이 2.1㎞ 구간의 공덕세천을 정비해 주민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와 완주군은 이번 용역을 통해 공덕지구 일원에 대한 항구적인 재해예방을 위한 △제방 정비(2.1㎞) △배수로 정비(0.6㎞) △펌프 시설 설치(1개소)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준비절차를 거쳐 오는 4월 중 용역에 착수할 예정으로, 내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모두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동시에 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더불어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를 추진, 용역이 완료되는 내년 6월부터는 용지보상 절차에 착수키로 했다. 이후 시는 오는 2026년 상반기 공사에 착수해 오는 2028년까지는 모든 정비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행복한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추진

전주시는 올해도 전주시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와 함께 민·관 협력 주거복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누구나 행복한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시는 올해 △주거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주거복지 종합상담·정보 제공 △긴급 임시거처 순환형 임대주택 운영 △주거생활 유지 지원 △비정상 거처 거주자 주거상향 지원 등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신규사업으로 에너지 소외계층인 연탄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화석에너지에서 저탄소 난방 에너지로 전환해주는 ‘탄소중립 주택난방 플랫폼 구축·운영사업’이 추진된다.

뿐만 아니라, 시는 올해 내 집을 스스로 고쳐 쓰는 문화확산을 위한 ‘시민참여 집수리학교’의 주말반을 신설하는 등 기존보다 확대 운영하고, 대학생과 청년 가구 대상으로 ‘전세 사기 피해 예방 교육 및 법률상담소’ 등도 운영하는 등 보편적 주거복지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와 센터는 지난해 1000건 이상의 주거복지 상담·정보를 제공했으며, 224건의 주거취약계층 긴급 임시거처 제공과 주택난방 개선, 긴급 임대료·이사비 등 지원했다.

한편 주거 관련 문제를 겪고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전화(063-281-0160)로 문의하거나, 센터 누리집에서 온라인 상담을 이용하면 된다.

/김옥기 기자

시민이 행복한 전주 도서관 만든다

도서관본부, 독서문화 · 도서관 · 출판 분야 4대 추진전략 제시

전주시는 20일 도서관본부 신년브리핑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전주 도서관’을 비전으로 한 독서문화·도서관·출판 분야 4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전주시가 2024년 새해에도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선도적인 독서문화 정책을 펼치고, 도서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점차 정비하는 등 대한민국 책의 도시 명성을 이어가기로 했다.

시는 20일 도서관본부 신년브리핑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전주 도서관’을 비전으로 한 독서문화·도서관·출판 분야 4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4대 추진전략은 △책 즐기는 독서문화 확산 △시립도서관 복합문화공간 전환 △전주 3대 책문화산업 축제 성공적 개최 △미래를 위한 도서관 시설 정비이다.

먼저 시는 시민의 독서율을 올리고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전주책사랑포인트 ‘책쿵 20’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학생 및 청년 대상 이벤트를 펼치고, 누리집과 연계해 모바일로 도서를 예약하고 찾아갈 수 있는 예약기능을 추가하는 등 더욱 똑똑해진 서비스를 선보인다.

또한 시는 올해 도서관의 복합문화공간으로의 전환을 지속 추진, 서신·완산·쪽구름도서관 3개 도서관의 리모델링을 완료할 계획이다. 서신·완산도서관은 오는 6월, 쪽구름도서관은 오는 8월 각각 재개관하며, 도서관별로 영어와 글쓰기, 다문화를 주제로 한 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에는 전주지역 12개 시립도서관에 147만 1000여 명, 12개 특성화도서관에 50만여 명 등 총 197만여 명의 이용자가 도서관을 다녀갔다. 코로나19 이후 도서관을 찾는 시민이 계속 증가하면서 지난 2022년 대비 대출권수는 5%, 이용자수는 24% 각각 증가했다. 시는 이같은 성과가 공공도서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전환하고, 예술·여행 등 특화된 주제와 지역 특색을 반영한 특성화도서관이 활성화됐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전주 3대 책문화산업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책문화산업 저변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먼저 시는 오는 5월 31일부터 6월 23일까지 팔복예술공장과 전주시립도서관, 지역서점에서 ‘제3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을 개최한다.

이후 오는 7월 6일과 7일에는 문화공판장 작당에서 독립출판 및 창작인들의 독립출판물을 판매하는 ‘독립출판 북페어 전주책쾌’를 연다. 특히 전주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독서출판문화축제인 ‘2024 전주독서대전’은 오는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전주한벽문화관 일원에 열린다.

여기에 시는 지난해 2800여 명이 참여한 전주도서관 여행의 경우 올해 복합 문화시설 탐방과 체험코스를 추가하고, 특수교육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도서관 여행을 추진하는 등 전국 유일의 도서관여행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뿐만 아니라 시는 지역의 작은도서관 및 출판 제작 활성화를 위해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사업과 출판문화산업 성장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끝으로 시는 효자·건지·아중도서관은 올해 리모델링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해 복합문화공간으로의 변신을 준비하고, 아중호수를 배경으로 한 독서·자연·휴식을 위한 아중호수도서관도 준공할 예정이다. 또, 도서관 내 다양한 안전시설을 확충해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기로 했다.

이강준 전주시 도서관본부장은 “모든 세대가 책·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시민의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고, 책문화산업이 전주의 경쟁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의회, 서울 · 부산 중구의회와 협력 방안 논의

전주시의회가 서울 중구의회, 부산 중구의회와 각각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전주시의회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길기영 의장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이길희 의장을 비롯한 30여 명의 방문단과 각 지역과 의회의 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방문단 일행은 전주시의회 본회의장 등 각종 시설을 둘러보고, 의정활동과 정책, 지역사업 발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각 지역의 문화와 관광, 환경,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력에도 적극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방문단은 시의회 방문에 이어 지역도시 정비 및 문화예술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도시재생센터와 팔복예술공장 등을 방문했다.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와 부산특별시 중구의회의 방문은 상호 효과적 의회 운영과 양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여러 시·군과의 교류를 활성화해 지역 발전을 견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정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